

땅에 떨어진 교권...“교직 만족한다” 23.6% 역대 최저 기록

교총,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 지도·학부모 민원”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벌인 설문에서 교직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교사가 5명 중 1명에 그쳤다는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에 대한 물음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는 응답은 23.6%(1591명)였다.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는 48%(3243명)로 절반에 육박했고

‘보통이다’는 28.3%(1913명)였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택할지 묻자 ‘그렇다’고 답한 교사는 20.0%(1348명)에 그쳤다. ‘그렇지 않다’ 58.2%(3927명), ‘보통이다’ 21.7%(1465명)였다. 최근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은 87.5%(5905명)였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선택지 중 2개를 택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라는 응답이 30.4%(4098명)로 1위였고, 학부모 민원(25.2%·3397명)이 그 다음이었다.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교사는

69.7%(4704명)였다. 이로 인한 문제로는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 46.3%(3129명),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 17.3%(1173명) 등 순으로 답이 많았다. 교총은 “학생을 적극 지도했다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무차별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만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에 자존감이 무너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교육 현안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교사 96.2%(6495명)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생의 교권침해 관련 징계를 학교생활 기록부에 남기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교사는 80.5%(5433명)였다. 교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내달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적 근거로 담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교실 퇴실 명령권’을 시행령에 담자는 주장에는 87.5%(5910명)가 동의했다. 교총은 “퇴실 명령권은 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법령에 명시하면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이 서술형 답변에서 교사를 모욕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1.3%(5487명)로 나타났다. 예전보다 교사에 대한 경제적 처우가 저하됐다는 응답은 68.5%(4623명)였다. 시급한 과제로 답인·보직수당 등의 합리적 인상

을 24.6%(1660명)가 꼽았다. 교총은 “지난 20년 간 보직수당은 월 7만원으로 동결돼 있다”며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해마다 1%대 보수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줄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2025년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긍정하는 응답은 37.4%(2524명), 부정적 33.1%(2232명)로 집계돼 엇갈렸다.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로는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가 등 교육계 일부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꼽은 교사가 50.8%(3432명)였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도지사와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택한 응답은 10.1%(679명)에 그쳐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응답(21.9%)보다 낮았다. 최이슬기자



잠수교 두벽두벽 축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열린 2023 차 없는 잠수교 두벽두벽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주말 국회 앞 촛불 추모제

‘4번째 죽음’ 양천구 피해자 추모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가 올해 들어 4번째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3일 고인을 추모하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강동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경부터 국회 앞 농성장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과 전세사기 피해자 50여명은 손에 촛불을 밝힌 채 자리했다.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그분(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쟁, 쓰러짐을 열심히 뛰었다고 한다. (돌아가신) 그 날도 은행에 가서 대출에 대해 상담받을 계획을었다고 한다”며 “얼마나 몸도 쉼 없이 사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라고 애도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 위원장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분까지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우리가 빨리 목소리를 내야겠다”며 “여론을 덮고 열림동땅 같이 치우는 법안이 아니라 피해자를 구제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도 “2억4000만원의 거액의 빚이 태버린 보증금을 떠안고 본업 외에 부업까지 하던 피해자가 주검으로 발견됐다”며 “이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도 애도의 목소리와 함께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 상임대표인 전남병 목사는 양천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목사 지인도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피해자들은 개인적 불운의 당사자가 아닌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들이다. 우리가 모여서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고 했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법정 스님도 전세사기를 당한 또 다른 스님이 투병 중이라고 전했다. 천주교민간사목위원회 나충렬 신부는 “이게 사회적 재난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사회적 재난인가”라며 “지난 2월28일 이후로 벌써 네 번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돼야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참석자들은 추모 목념을 한 뒤 “생명이 달려 있다.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하라”,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함께 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각오를 다졌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8일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조사 중이다. A씨는 빌라왕 김모씨와 지난해 6월 전세금 3억원으로 빌라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그해 10월 김씨가 돌연 사망하면서 대출이 대부분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여당에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 ▲공공의 선구매 후회수 방안(보증금채권 매입) 등이 포함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김재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